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지난 21일 검찰 출석 이후 6일 만에 결정... 검찰 "사안 매우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6일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공범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공여자에게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5개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의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가 각각 적용됐다.

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



삼성동 자택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경찰들이 교대하며 우비를 갈아입고 있다.

태강 전 체육국장 등 부당인사 조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등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크라이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투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후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관련자들 진술·증거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하나하나 비교·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뉴시스

## 도의회, LX전북본부 준치 축구 결의안 채택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을 규탄하고 이의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전체 위원의 공동발의 형태로 제안한 것으로, 거도적인 비판에 직면해 움츠러든 관련 논의를 중단시키는 데 쉼기를 박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원수 위원장은 "전북 뭍 찾기를 외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전북 뭍 찾기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현실은 전북도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결연한 자세로 맞서는 것만이 전북본부 통폐합 논의의 부활을 막고, 제대로 된 전북 뭍 찾기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정치권을 물론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부와 행자부, 국토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세월호 "배수·고박 막바지 작업 박차"

### 목포신항으로 30일 전후 출발 예상

세월호가 최종목적지인 목포신항으로 떠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에 따르면 세월호는 오는 30일 전후 최종목적지인 목포신항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는 현재 목포신항 이동에 앞서 선체 안에 쌓인 유성 혼합물(해수·폐유)을 배출하고 있다. 반잠수식 선박이 부양할 때부터 유성혼합물이 침문 등 개구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돼 지난 26일 이후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현재 현재 배출되고 있는 유성혼합물은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서 완전 회수하고 있다.

천공 등을 통한 선체 내 유성혼합물 회수는 용접작업이 수반되는 선체 고정 및 부력탱크 제거 작업과 병행해 진행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목포신항 점안 및 거처 후 실시한다. 다만 순수한 해수로 채워진 평형수 탱크는 천공 등을 통해 28일까지 배수할 계획이다.

목포신항으로 이동 중에 세월호 선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고정시키는 작업도 시작해 이틀간 진행된다.

아울러 해수부와 인양 업체 상하이셀비지는 세월호 침몰 지점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유실방지 사각펜스를 설치했다. 미수습자 및 유류품 등에 대한 해저 수색은 4월 초부터 시작된다.

장기육 선체인양추진과장은 "세월호가 있던 바닷속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유실방지 펜스를 설치했고, 해당 구역은 가로 40m, 세로 20m 크기의 40구역으로 다시 분리됐다"며 "3단계로 인력으로 수색할 계획이고, 40구역 중 2개 구역은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 38구역은 왕복으로 1m 폭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9~30일에는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제거를 진행한다. 반잠수식 선박의 원활한 부양을 위해 선미 측에 날개탑 4개를 추가 설치(기존 2~6개)했다. 세월호 선체를 육상으로 운반할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 M/T)의 진입경로를 막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세월호는 선체에 남은 해수와 잔존유를 빼내는 과정을 거친 뒤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하면 비로소 이동 준비가 끝난다. 이후 105km 가량 떨어진 최종목적지인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 반잠수식 선박이 평균 시속 4~5노트(시속 약 10km)로 항해하면 10시간 뒤 목포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전국 기초지자체, 지방분권 개헌안 제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개헌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로 희망했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우선 헌법 제3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도 2003년 헌법개정시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제3조 제1항에 명시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을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Government)로서 인정하고 입법·행정에서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문 위원장은 중앙정부(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헌법에 규정해 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비상 국가법률-광역자치법률-기초자치법률 순의 상위법 체계는 우선하되, 헌법에 규정한 자치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치법률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과 관련해 국세의 종류 및 기초 및 광역 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과 중앙의존적 재원구조가 현행 세법에 있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8대2 구조로 고착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바꿔야 한다고 국세로 지정된 양도소득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의 이양 후 배분과 관련해 해서 광역세로 걷은 뒤 배분방식은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축

## '지방분권국'·지방정부 입법권 규정

### 지방세 비중 6대4로·양도세 지방 이양

소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며 지방정부 재정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향후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위원장은 개헌시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회에서"충분한 논의 거처야 한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예정돼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효율도 높고 또 내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이룰 시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급지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